

23일 Market Index			
▲ 코스피	4117.32	▼ 코스닥	919.56
	(+11.39)		(-9.58)
▼ 금리	2.980	▲ 환율	1483.10
	(-0.019)		(+3.00)

성장판 닫힌 T커머스… 이재명표 규제 혁신에 숨통 트이나

중소 전용 T커머스 신설 수면위
채널신설·규제완화 등 추진계획
구체적 논의 내년으로 넘어갈 듯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소기업 전용 티커머스(T커머스) 신설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절박함이 전달될 것”이라며 채널 신설 요청에 힘을 실어주면서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검토되던 티커머스 활성화 방안이 현 정부 들어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격상되며 채널 신설과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당초 12월 내에 ▲중기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 ▲T커머스 규제 완화 ▲홈쇼핑 재승인 조건 완화 ▲송출 수수료 상생 방안 등을 담은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기술 발전으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낡은 규제를 혁파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연내 발표는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다. 지난 10월 1일 홈쇼핑 및 유료 방송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됐으나, 김종철 위원장이 이달 19일야 취임하는 등 조직 구성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시



크리스마스 ‘산타버스’ 운행

행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산타버스’를 운행하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23일 대구 북구 우주교통 차고지에서 열린 성탄 시내버스 산타 발대식에서 산타 복장을 한 운전기사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다. 올해로 13회째 열린 이번 행사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산타버스’를 운행하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

간 제약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을 통해 정부와 공영홈쇼핑 측은 “민간 홈쇼핑(평균 30%대)보다 현저히 낮은 20%대 수수료를 책정해 중소기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즉 생방송 편성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게 녹화 방송 기반인 티커머스가 재고 부담 없는 맞춤형

형 판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기조상 중기 전용 채널 신설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이지만, 이미 TV홈쇼핑과 티커머스를 합쳐 17개 소용 채널이 난립한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가 시장 판도를 바꾸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채널 수만 늘린다고 해서 판로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거라 보지 않으며 한정된 채널 안에

서 업계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평가다.

최근 티커머스 업계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급성장으로 시청자가 급감하며 성장판이 닫힌 상태다. 현재 논의되는 티커머스 규제 해소 방안이 절실한 이유다.

〈4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부동산 투자 옥죄고 모험자본 풀림 방지

증권사 자금 생산적 분야로 이동
금융위·금감원, 건전성 규제 개정

정부가 증권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세분화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 평가방법도 재정비한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본시장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이동시키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했다.

우선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 시 적용받는 NCR 위험값의 산출 방식을 변경해 부동산 건전성 규제를 보다 간간하게 바꾼다. 그동안 증권사는 채무보증, 펀드, 대출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일률적인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적용받아 왔다.

앞으로는 투자형태가 아니라 부동산 PF 여부와 사업 단계, LTV 수준에 따라 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이나 고LTV PF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값을 받는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부실 우려를 감안해 위험값이 현행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을 설정했다.

부동산 투자 ‘총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만 자기자본 대비 100% 한도로 규율했지만,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까지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모험자본 공급의 ‘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이행실적 산정 시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한다. 가령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로 100원을 조달하면 최소 25원만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하나,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으로의 자금 공급은 25원의 30%인 7.5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심사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李 전제구에 연임유력 ‘임종룡 향방’ 주목

李 대통령, 금융권 지배구조 겨냥
“부패한 이너서클, 재배권 행사
그냥 방치할 일 아니다” 꼬집어

우리금융 회장 후보자 4명 중
외부출신 회장 배출 가능성도



에 앞서 4명의 쏫리스트(2차 후보군)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접 및 심층 평가를 진행 중이다. 쏫리스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2명의 외부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외부후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금융 회추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임종룡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임 회장이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우리투자증권 출범, 동양·ABL생명 인수 등 굵직한 성과를 남겼고, 임기 동안 우리금융의 외형적 성장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내부 후보인 정진완 은행장은 최근야 임기 1년을 맞은 만큼 임 회장이 회장 레이스에서 독주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금융권의 ‘참호 연임’을 겨냥

한 정치권의 외풍에 임 회장의 연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금융지주를 겨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최고경영자 의중 대로 움직이는 사외이사를 통해 연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이나 관여하지 않으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자기를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금융지주 회장이 회추위에 참여하는 사외이사를 직접 선임한 뒤 손쉽게 연임을 결정짓는 ‘참호 연임’을 겨냥한 메시지다.

금감원은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최근 연임을 확정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선임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근본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미흡해서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대체로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이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과 금감원의 강도 높은 현장 검사 결정 이후 가장 먼저 차기 회장 후보자를 발표한다. ‘낙승’을 예상했던 임 회장의 연임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임 회장도 첫 취임 당시 외부출신으로 내부 출신을 누르고 선임됐던 만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외부후보군 가운데 차기 회장이 배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현장에서 “엄청 많은 투서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우리금융 회추위는 7명의 사외이사가 참여하며, 7명 가운데 4명은 과점주주(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푸른그룹·유진PE)가 추천한다. 회장이 직접 선임한 사외이사만으로는 연임을 확정할 수 없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김정은, 삼지연 호텔 준공식 참석…“관광문화 대표 도시로”
▲여건 ‘저수량’ 저진 ‘저수용량’…공공기관 제각각 ‘행정용어’ 통일된다

/사진 뉴시스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키로
▲군, KF-21 추가무장 시험사업 착수…2027년 양산기에 적용

▲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가능해진다…국무회의 통과
▲국표원,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발표